

소통·협력으로 교육협력 체계 구축

▶ 서거석 교육감의 소회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7월 1일 이후 '학생중심 미래교육'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여러 기관 및 단체와의 소통·협력에 공을 들였다. 그 대상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주체뿐만 아니라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대학, 나아가 타 시·도 교육청과 민간기관으로까지 확대됐다. 서거석 교육감 취임 이후 소통과 협력의 전북교육, 실력과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으로 도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기위해 힘들이 달려왔다. 전북교육청은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의 문을 더 활짝 열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조직개편 등 전북교육 대전환을 위한 기틀 마련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소통과 협력으로 강력한 교육협력 체계 구축

서거석 교육감은 취임하자마자 교육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난 7월 25~26일 전북도, 전북지역대학총협의회, 전북지역전문대학총협의회 등 14개 시·군·과도 교육청과 민간기관으로까지 확대됐다. 서거석 교육감 취임 이후 6개월간은 학생중심, 미래교육, 교원신장, 학생자치 강화 등 전북교육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취임 이후 6개월간은 학생중심, 미래교육, 교원신장, 학생자치 강화 등 전북교육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취임 이후 6개월간은 학생중심, 미래교육, 교원신장, 학생자치 강화 등 전북교육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취임 이후 6개월간은 학생중심, 미래교육, 교원신장, 학생자치 강화 등 전북교육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전북도와의 상시 교육협력 기구로 '교육협력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서거석 교육감과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6월 28일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통합적 교육 협력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이를 바탕으로 전북교육청은 조직개편이 예정된 내년 3월부터 교육협력추진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미 전북도는 지난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협력추진단을 꾸렸다.

교육협력은 타 시·도 교육청으로까지 확대됐다. 8월 31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전북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 그 결과, 서울 학생 27명이 10월부터 입실 자사초 등 농촌유학 시범사업을 준비한 6개 학교에서 마을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농촌유학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참여한 학생 27명 중 1명을 제외한 26명이 내년에도 농촌유학을 계속하겠다고 연장 신청을 했다. 전북농촌유학의 특징은 지역별 특색을 살려 1시·군 1복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기르는 테마식 농촌유학이라는 점이다. 진안 아토피안식학교, 순창 전통문화, 무주 태권도, 남원 판소리, 고창 생태예술, 임실 인문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농촌유학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참여한 학생 27명 중 1명을 제외한 26명이 내년에도 농촌유학을 계속하겠다고 연장 신청을 했다. 전북농촌유학의 특징은 지역별 특색을 살려 1시·군 1복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기르는 테마식 농촌유학이라는 점이다. 진안 아토피안식학교, 순창 전통문화, 무주 태권도, 남원 판소리, 고창 생태예술, 임실 인문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전주완산초와 전주군지중은 내년 통합운영학교로 전환된다. 통합운영학교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등 동일 부지 내 학교를 묶어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교장 1명에 각 학교에 교감을 두는 통합운영학교는 행정실, 급식실, 체육관, 운동장 등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한다. 지난 11월 두 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통합운영학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률은 67.4%, 반대 찬성률은 84.4%가 찬성했다. 통합운영학교는 지난 2017년 전주화정초등학교에서 의결되면서 예정대로 내년 3월 조직개편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조직개편은 정책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국 체제를 신설 정책국을 포함한 3국 체제로 전환하고, 기능 중심의 조직을 대상 중심으로 개편해 전문성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학교교육과를 유초등특수교육과·중등교육과로 분리하고, 사학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위해 사학팀을 신설했다. 또 사회적·환경적 변화와 정부 정책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안전, 노사, 그린스마트추진단 등 전담부서를 뒀다. 이와 함께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도 제정됐다. 교육정책 수립·시행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학생의회의 구성과 기능 △의원의 역할과 임기 △의장단 구성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 △회의 개최·소집 △예산의 지출·의결 반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학생이 교육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학생의회가 제안한 내용이 교육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초·중·고등학교별로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가동해 본격화했다. 우선 내년 3월 초등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기초학력 미도달로 관방된 학생은 보호자 동의 후 학습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맞춤형 학습자원을 제공한다. 이후 3차례의 향상도 검사를 실시한다. 1차(5~6월)와 2차(9~10월) 검사는 권장이지만, 3차(11~12월) 검사는 필수다. 검사 결과는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제공된다.

교실에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한 기초학력 협력교사를 배치한다. 초 60명, 중 40명 등 총 100명의 기초학력 협력교사가 초등학교 저학년 국어·수학·영어 수업 및 중학교 전 학년 수학 수업을 함께 지도해 학습부진을 적기에 해소하고, 부진이 누적되지 않도록 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지원청에 학력지원센터가 설치된다. 기초학력 협력교사(44명)와 현장 교사 중심의 학력지원단이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이밖에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인사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학생인권과 교원의 조화를 위한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 작업에도 착수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경청과 소통을 토대로 변화와 혁신을 이끌겠다"며 "교육계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소통하면서 전북교육이 잘돼서 너무 기쁘다. 전북교육에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교육 희망의 대전환에 도민 여러분과 교육가족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은성 기자)



농촌유학 지정 학교인 임실 자사초를 찾는 서거석 교육감.

전북교육 대전환 위해 달려왔다

"지난 6개월 전북교육 대전환을 위해 걸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교육현장을 방면에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서거석 교육감의 취임 후 6개월은 '소통과 협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전북교육은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다. 소통과 협치로 전북교육을 살려내겠다는 취임 일성을 몸소 실천한 6개월이었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7월 25일과 26일 전북도청, 전북지역대학총협의회, 전북지역전문대학총협의회와 교육협력 추진체계 구축 협약을 가진 데 이어 14개 시·군 지자체와도 지속적인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미 8개 시·군과 협약을 마쳤고 나머지 시·군과도 조속한 시일 내 업무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상시 교육협력 기구인 '교육협력추진단'은 조직개편이

"14개 시군 지자체와도 지속적인 협약 추진 중 교육협력추진단, 내년 3월 가동... 교육협력 탄력"

시행되는 내년 3월부터 가동되기 때문에 교육협력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탄탄한 교육협력은 전북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취임 이후 6개월간은 학생중심, 미래교육, 교원신장, 학생자치 강화 등 전북교육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취임 이후 6개월간은 학생중심, 미래교육, 교원신장, 학생자치 강화 등 전북교육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취임 이후 6개월간은 학생중심, 미래교육, 교원신장, 학생자치 강화 등 전북교육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했다."

"학생중심 미래교육" 서거석 교육감 취임식

모화 계획은 그동안 성과를 내지 못하다 서거석 교육감 취임 후 통합운영학교 전환으로 방식이 바뀌면서 결과물을 만들었다.

전북도와 상시 협력 기구 '교육협력추진단' 운영

도·서울시교육청 등과 전북농촌유학 활성화 협약 농촌유학 만족도 매우 높아

군산상고 일반계고 전환 등 어려운 현안 해결에 큰 도움

전북교육 대전환 위해 조직개편 조례 포함 각종 자치법규 손 봐

학습지원 계획 발표로 학생 학력 향상 밑그림

학생인권·교권 조화 위한 교육인권조례 제정 착수

전북교육 대전환 위한 기틀 마련

전북교육청은 '전북교육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조직개편 조례안을 포함한 각종 자치법규를 손봤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지난 11월 전북도의회에서 의결되면서 예정대로 내년 3월 조직개편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조직개편은 정책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국 체제를 신설 정책국을 포함한 3국 체제로 전환하고, 기능 중심의 조직을 대상 중심으로 개편해 전문성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학교교육과를 유초등특수교육과·중등교육과로 분리하고, 사학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위해 사학팀을 신설했다. 또 사회적·환경적 변화와 정부 정책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안전, 노사, 그린스마트추진단 등 전담부서를 뒀다.

이와 함께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도 제정됐다.

교육정책 수립·시행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학생의회의 구성과 기능 △의원의 역할과 임기 △의장단 구성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 △회의 개최·소집 △예산의 지출·의결 반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학생이 교육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학생의회가 제안한 내용이 교육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초·중·고등학교별로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가동해 본격화했다. 우선 내년 3월 초등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기초학력 미도달로 관방된 학생은 보호자 동의 후 학습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맞춤형 학습자원을 제공한다. 이후 3차례의 향상도 검사를 실시한다. 1차(5~6월)와 2차(9~10월) 검사는 권장이지만, 3차(11~12월) 검사는 필수다. 검사 결과는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제공된다.

교실에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한 기초학력 협력교사를 배치한다. 초 60명, 중 40명 등 총 100명의 기초학력 협력교사가 초등학교 저학년 국어·수학·영어 수업 및 중학교 전 학년 수학 수업을 함께 지도해 학습부진을 적기에 해소하고, 부진이 누적되지 않도록 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지원청에 학력지원센터가 설치된다. 기초학력 협력교사(44명)와 현장 교사 중심의 학력지원단이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이밖에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인사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학생인권과 교원의 조화를 위한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 작업에도 착수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경청과 소통을 토대로 변화와 혁신을 이끌겠다"며 "교육계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소통하면서 전북교육이 잘돼서 너무 기쁘다. 전북교육에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교육 희망의 대전환에 도민 여러분과 교육가족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은성 기자)



교육협력 추진체계 구축 협약식.



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계획 발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주체 100인 원탁회의.